

5

중국경제의 부상과 일중 경제관계

김규판



- (위) 시라카바 가스전의 가스 시추선(사진 출처: 산케이신문)
- (오른쪽 페이지 위 왼쪽부터) 희토류 광물들, 희토류를 사용한 도요타 프리머스의 엔진, 센카쿠열도



1. 머리말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일본의 GDP를 추월하고 G-2로 부상함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줄곧 중국경제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한 세간의 관심이 현실화되었다. 한국사회의 중국에 대한 인식도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생산기지에서, 막대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소비시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양자 간 관계로 좁혀 보면, 중국이 항상 거대한 소비시장이라는 ‘호혜적’ 존재로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양자 간 경제관계란 항상 경쟁 혹은 마찰과 같은 수식어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2000년대 들어 일본의 중국경제에 대한 인식은 극단적인 경멸 내지는 경계심으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매스컴에 등장하는 ‘중국리스크’ 혹은 ‘중국위협론’은 그러한 심리를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이라든지, 혹은 중국의 경제대국화로 일본경제의 존망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양극단의 ‘심리’이다.

이 논문은 2000년대 이후 중국경제의 위상을 간략히 개관한 다음, 중국리스크

* **지은이 | 김규판** 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경제실 일본팀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学)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응용미시경제학. 주요 저서로는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과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일본과 EU의 환경 분야 대외협력 전략과 시사점』(공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일본의 지방재정개혁 및 재정분석·평가에 관한 연구』(감사연구원, 2007) 등이 있다.

크와 중국위협론이라는 핵심용어에 기대어 일본의 중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일중 경제 관계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문제의식은 일본 내에서 회자되고 있는 중국리스크와 중국위협론이 과연 ‘객관화’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고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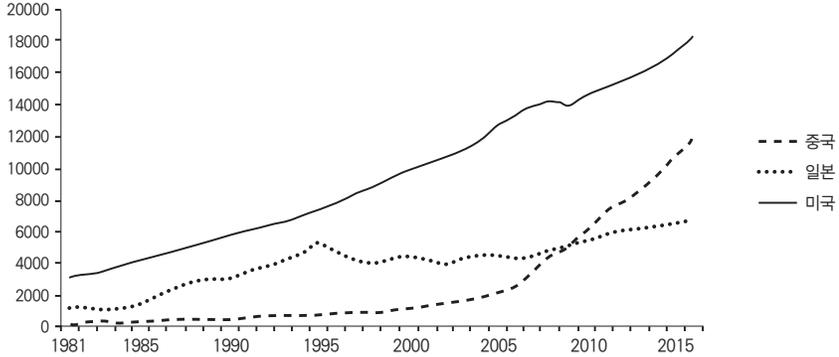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절 “중국경제의 부상”은 최근 이른바 G-2로 부상한 중국의 위상을 GDP, 무역규모, 외환보유고와 같은 경제 측면에서 확인하고 있다. 이어서 제3절 “중국리스크”에서는 중국경제의 급부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안고 있는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일본 내 이코노미스트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중국은 정치·군사·사회 측면에서도 다양한 위험요인을 안고 있지만, 여기서는 가급적 경제 측면에 국한하여, 과연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은 지속가능한 것이며, 일본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중국 비즈니스 리스크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제4절 “일중 간 외교 분쟁과 경제협력: 두 가지 사례 연구”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의 탈냉전 과정에서 발생한 일중 양국 간 갈등 사례를 통해 ‘중국위협론’이 그 사례에 어떻게 투영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 일중 간 외교 갈등의 대표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은 2000년대 들어 단행된 일본의 대중(對中) ODA 공여 중단과, 역시 2000년대 들어 격화되었고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는, 동중국해를 둘러싼 일중 간 자원개발 및 자원외교 문제이다. 이들 사례 분석을 통해 일본 내의 중국위협론이 외교 측면에서 큰 위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5절 “일본의 대중 무역 및 직접투자: 중국위협론의 검증”에서는 정치·외교 측면에서의 중국위협론이 일중 경제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해명하고자 한다. 이른바 정냉경열(政冷經熱)이라는 표현으로 압축되는 냉전시대의 일중관계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이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중국위협론이 일중 경제 관계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은 쉬워 보이지 않지만, 중국경제의 부상은 첫째 일본의 대중(對中) 무역수지를 크게 악화시킬 것이고, 둘째 일본기업의 중국 이전에 따라 일본 국내의 산업공동화가 불가피

〈그림 1〉 미중일 3국의 GDP 추이

(10억 달러, 경상가격)



	1981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미국	3,126.9	4,217.5	5,800.5	7,414.6	9,951.5	12,623.0	14,526.6	17,398.5
중국	168.4	307.0	390.3	727.9	1,198.5	2,256.9	5,878.3	10,607.6
일본	1,183.8	1,364.2	3,058.0	5,264.4	4,667.4	4,552.2	5,458.8	6,610.9

단위: 10억 달러

주: 2011년 이후는 IMF의 추정치임.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September 2011.

할 것이라는 경계 심리를 통계에 입각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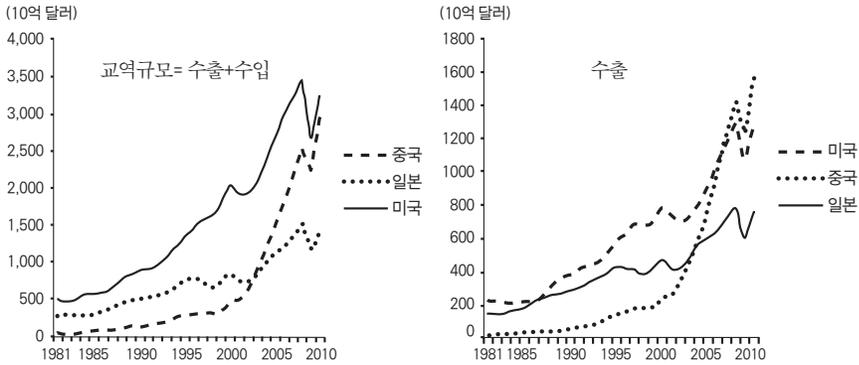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제6절 “맺음말”은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리스크와 중국위협론에 대한 평가로 대신하고 있다.

2. 중국경제의 부상

1978년 시작한 개혁·개방을 계기로 중국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음에는 이견이 없다. 1978년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의 GDP는 1,5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0년대 초반에는 4,0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10년에는 6조 달러 수준에 육박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2010년까지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9%였고,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무려 10.4%에 달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GDP 경제규모는 2007년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로 부상한

〈그림 2〉 미중일 3국의 교역규모 추이



		1981	1985	1990	1995	2000	2004	2007	2010
미국	수출	238.7	218.8	393.6	584.7	781.9	818.5	1,163.0	1,277.6
	수입	273.4	352.5	517.0	770.9	1,259.3	1,525.4	2,020.4	1,968.8
	합계	512.1	571.3	910.6	1,355.6	2,041.2	2,343.9	3,183.4	3,246.3
중국	수출	22.0	27.4	62.1	148.8	249.2	593.3	1,217.8	1,578.3
	수입	22.0	42.3	53.3	132.1	225.0	561.2	956.2	1,396.2
	합계	44.0	69.6	115.4	280.9	474.2	1,154.6	2,174.0	2,974.5
일본	수출	151.5	177.2	287.6	443.1	479.3	565.7	714.2	769.8
	수입	142.9	130.5	235.4	335.9	379.5	454.5	619.7	692.4
	합계	294.4	307.6	522.9	779.0	858.8	1,020.2	1,333.9	1,462.2

단위: 10억 달러
출처: CEIC data base.

데 이어,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 바야흐로 미국과 중국이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G-2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2020년에는 중국 GDP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경제의 부상은 무역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연간 교역량은 1978년 개혁·개방을 계기로 1988년 1,000억 달러를 달성했고, 2001년에는 WTO 가입을 계기로 전면적인 개방이 이루어져 2007년 연간 교역량이 2조 달러를 돌파했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교역규모는 2004년부터 일본을 추월하여 미국 다음의 세계 2위의 위상을 확보하였고, 수출만 놓고 보았을 때는 2007년부터 이미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의 수출 대국이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이 수출 의존적이었음을 직감케 하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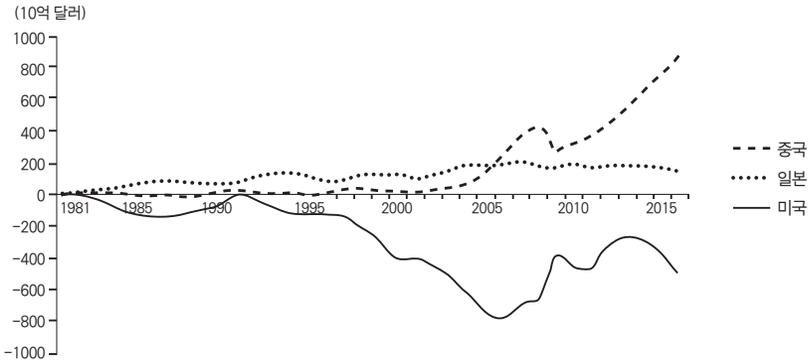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점은, 중국의 수출의존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요인이 바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적극적 유치라는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1단계인 1979년부터 1983년까지 연평균 3.6억 달러밖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지 못하였지만, 특히 WTO 가입 이후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으로 개혁·개방 4단계로 불리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연평균 약 72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섬유, 의류, 맥주와 같은 경공업 제품 100여 종과 철강, 시멘트, TV 등에서도 세계 최대 생산국의 자리를 확보하였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¹⁾

마지막으로 G-2로 중국경제가 부상하였음을 증명하는 근거는 외환보유고이다. 미국이 지난 1970년대 이래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라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다음 페이지의 <그림 3>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막대한 경상수지흑자를 배경으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고 있다. 중국의 경상수지흑자 규모는 2006년을 기점으로 일본을 능가함으로써 세계 1위로 부상하였고, 2010년에는 일본의 1,959억 달러보다 약 1,000억 달러 많은 3,053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막대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에 FDI나 ‘핫머니’를 망라한 외국인 투자 유입이 가세한 결과, 중국은 2006년 2월을 기점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가로 부상하였고, 2011년 6월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 1,975억 달러로 세계 2위의 일본(1조 614억 달러)보다 3배 정도 많다. 같은 시점에서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약 3,200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향후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1)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통 큰 구매자’로 전환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다소 시기상조라고 봐야 할 것 같다. 그 이유로는 첫째,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 자체가 수출과 국내투자에 의존한 나머지, 개인소비(내수)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47%에서 2010년에는 34%로까지 하락하고 있는 데다, 다른 국가의 50~60% 수준에 비해 낮은 점, 둘째, 중국의 1인당 GDP가 2010년에 4,000달러를 초과하는 등 개인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10년 미국의 연간 개인소비가 약 10조 달러인 반면, 중국의 경우는 약 2조 달러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아직 G-2에 걸맞은 소비규모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2010년 기준 GDP 대비 개인소비 비율을 다른 BRICS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인도 61%, 브라질 60%, 러시아 51%인 반면, 중국은 34%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림 3〉 미중일 3국의 경상수지 추이



	1981	1985	1995	2000	2005	2006	2010	2015
미국	5.0	-118.2	-113.6	-416.3	-745.8	-800.6	-470.9	-381.5
중국	2.3	-11.5	1.6	20.5	134.1	232.8	305.3	746.7
일본	4.8	51.2	111.4	119.6	165.7	170.4	195.9	156.5

단위: 10억 달러

주: 2011년 이후는 IMF의 추정치임.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September 2011.

3. 중국리스크

일본 내에서 회자되고 있는 중국리스크와 관련된 가장 극단적인 스펙트럼은 2012년 중국붕괴, 2013년 중국 군사 쿠데타와 같은 반공극우파의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그러한 극단적 주장의 근거를 해명하기보다는, 가급적 경제 관점에서 중국이 안고 있는 위험요인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 중국리스크를 논해 보기로 한다. 물론 이하에서 제기하는 중진국의 덫이나 비즈니스 리스크 외에도 빈부격차 문제, 부동산 버블 문제,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 위안화 절상문제 등과 같이 논자에 따라 중국리스크의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고 논쟁의 소지도 많을 것이다. 여기서는 중장기적 중국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기업비즈니스 관점에 한정해 논의하기로 한다.

가. 중진국의 덫

ADB는 ‘중진국의 덫’(middle income trap)을 개발도상국이 빈곤상태에서 벗어

나 1인당 GDP 5,000달러 정도의 중진국에 도달한 순간부터 경제성장이 멈추고 그 이후로는 선진국 문턱에 다가설 수 없게 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²⁾ 역사적으로 보면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에 걸쳐 중진국 경제수준에 도달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들 국가가 중진국의 뒷에 빠진 이유는 제조업 경쟁력의 저하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이들 국가가 경제 성장 결과 중진국 경제수준에 도달하면 값싼 임금을 무기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추격으로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고, 그렇다고 높은 기술수준을 요하는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수출경쟁력이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노다 마리코(野田麻里子)는 현재 중국의 1인당 GDP가 4,000달러를 상회하였음을 상기하면, 중국도 중진국의 뒷에 빠질 수 있다고 본다. 논거는 매우 단순하다 할 수 있는데, 제조업 제품 가운데 일반기계나 가전 전자제품은 부품 국산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전기기계나 운송기계의 부품은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등 여전히 제조업 경쟁력이 탄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³⁾ 예를 들어 2009년 중국의 대미 아이폰 3G 수출 금액 20억 달러 중에서, 실제 중국이 조립을 통해 공헌한 부가가치 비율은 수출가격의 3.6%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부가가치는 일본(33.9%), 독일(16.8%), 한국(12.8%)과 같은 외국기업들의 부품이나 기술에서 비롯되었듯이,⁴⁾ 중국은 지금과 같이 부품을 수입한 뒤 단순 조립하여 재수출하는 방식의 경제성장 모델로서는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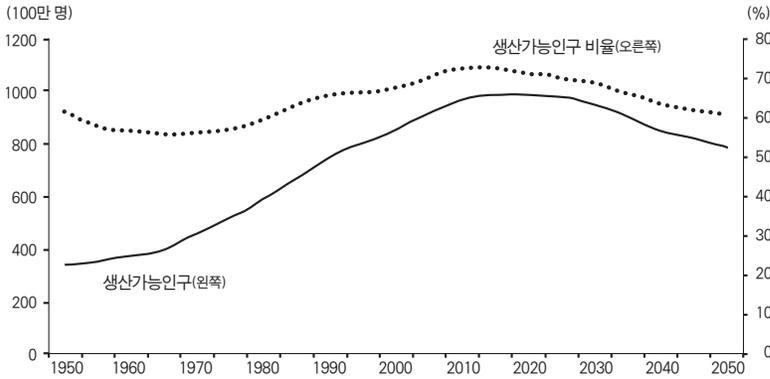
그런데 ‘중진국의 뒷’이라는 중국리스크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과연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 가능하겠는가라는 시각이 필요하다. 먼저 인구구조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주지하듯이,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10%에 가까운 고도 경제성장

2) ADB(Asian Development Bank), *Asia 2050: Realizing Asian Century*, August 2011, p.4.

3) 野田麻里子, 「立ちほだかる中進国の罫」, 『エコノミスト』, 2011년 12월 6일자.

4) Yuqing Xing · Neal Detert, "How the iPhone Widens the United States Trade Deficit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B Working Paper*, no. 257, December 2010, p. 11 참조.

〈그림 4〉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추이와 전망



	1965	1975	1985	1995	2005	2010	2015	2020	2025	2035
생산가능인구 (100만 명)	398.1	516.7	673.0	805.2	922.7	970.5	995.8	988.9	981.3	909.8
전체인구대비 비율(%)	56.0	56.5	63.7	66.3	70.6	72.4	72.7	71.3	70.3	65.9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0 Revision [http://esa.un.org/unpd/wpp/unpp/panel_indicators.htm, 접속일 : 2011. 12. 7]

에 성공하였다. 그 배경에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노동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1980년대부터 ‘1가구 1자녀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인구 고령화와 함께 전체 인구에서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한다.

이와 같은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리스크라 할 수 있다. 첫째, 생산가능 인구의 저하는 노동력 인구, 나아가 노동투입량의 감소로 연결되어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을 제약한다. 그리고 고령화는 국가 전체의 저축률 저하와 투자재원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간접적인 경제성장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고령화는 중국의 사회보장시스템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킨다. 현재의 사회보장시스템 아래서 고령화가 급진전될 경우, 중국경제는 국민들의 노후불안 심리 가운데로 소비가 위축되어 ‘수요’ 측면에서의 성장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나아가, 일부 일본 이코노미스트들⁵⁾은 현재 중국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이 거

5) 河野柳太郎, 「中国は70年代の日本の轍を踏むか」, 『エコノミスト』, 2011년 12월 6일자; 関志雄, 「ルイス転換点の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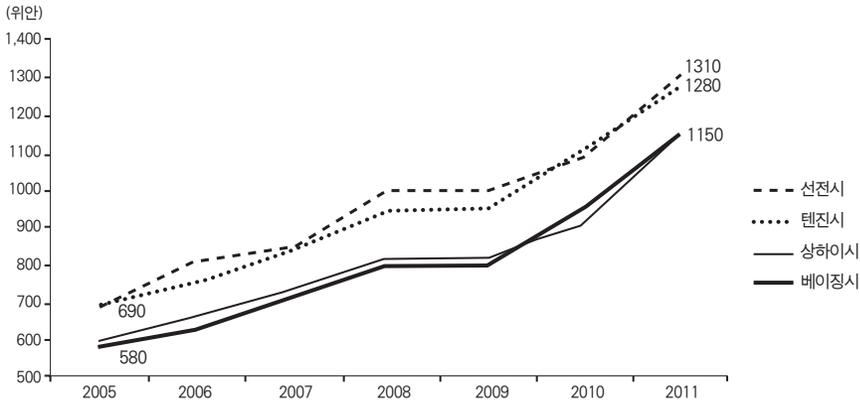
의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1970년 전후의 일본경제에 빗대어 중국리스크를 논한다. 일본경제는 1973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과거 9%대의 고도 성장단계에서 4%대의 저성장 단계로 진입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버블붕괴로 다시 1%대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다시 말해, 1970년을 전후로 한 일본의 '루이스 전환점'(Lewis turning point), 즉 더 이상 9%대의 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고갈되는 현상이 현재 중국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임금상현상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도시지역으로의 농촌인구 유입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은 데서 비롯되고 있는데, 일부 연해지역에서는 농촌 출신의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해서는 2~3년 전에 비해 2,3배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연해지역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숙련노동자나 기술자는 물론이고 단순노동자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중국 연해지역의 노동력 부족현상은 '서고동저'라는 최근의 경제성장 패턴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2009년 동부지역의 이농 노동자는 전년에 비해 888만 명 줄어든 9,076만 명이었던 반면에, 중부와 서부지역에서는 각각 618만 명과 775만 명이 증가한 2,477만 명, 2,940만 명으로 나타났다.⁶⁾ 이에 맞춰 임금상승률 역시 중부와 서부지역이 각각 5.9%, 8.9% 증가한 반면, 동부지역은 5.2%에 그쳤다. 그간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연해지역의 동부지역보다는 중부와 서부 쪽의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증거이면서도, 이제는 농촌인구의 유입이 동부지역보다는 중서부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중국 연해지역과 동부지역에서 2011년 한해에만 최저임금을 인상한 곳은 무려 20개 지구에 달한다. 이들 지구 중 월 최저임금이 높은 곳은 광둥성(廣東省) 선전(深圳)시(1,320위안), 저장성(浙江省) 항저우(杭州)시(1,310위안), 광둥성 광저우(廣州)시(1,300위안) 등지이다.

来を示唆する民工荒, 『中国経済新論』, 経済産業研究所, 2010년 4월 28일자 참조.
6) 中国国家统计局農村司, 『2009年農民工監測調查報告』, 2010년 3월 19일자 참조.

〈그림 5〉 중국 주요 도시의 월 최저임금 추이



출처: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http://www.mohrss.gov.cn/index.html>].

〈그림 5〉만 보더라도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요 도시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수준이 2배 이상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비즈니스 리스크

일본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대중(對中) 비즈니스 리스크는 중국이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라는 점과, 과거사 문제나 영토분쟁을 둘러싸고 최근 일중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외국, 특히 개도국에서 경제활동을 개시하거나 유지할 때 그 국가가 지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 고유의 리스크, 즉 국가위험(country risk)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만, 일본기업들은 양국 간 관계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비즈니스 리스크를 중국리스크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기업들의 대중(對中) 비즈니스 리스크에 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표 1〉에 정리한 것처럼, 특히 2010년 10월 발생한 센카쿠열도 분쟁을 계기로 최근 들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예를 들어 1997년 이후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에 4개의 매장을 개설한 일본 유통업체 이토요카도가 센카쿠열도 분쟁 직후 전개된 반일시위로 임시휴업에 처한 사례나, 무기(無機) EL(Electro Luminescence)을 개발·제조하는 일본 벤처기업 EL스트림이 2010년

〈표 1〉 일본기업의 대중 합작 해지 사례

일시	일본기업	중국 측 파트너	업종	내용
2009년 7월	부라더공업	中國標準縫紉機公司	공업용 미싱제조	중국 측 지분 취득 후, 사업환경 악화를 이유로 지분 매각
2009년 9월	일본생명보험	上海廣電集團	보험업	중국 측의 경영위기로 합작 해지, 그 후 중국 국유자산관리회사와 재합작
2009년 9월	마크테크	上海材料研究所 銅羅探傷材料廠	검사기기 제조	경영방침을 둘러싼 이견으로 계약만료 후 해지
2010년 1월	다이하쓰공업	一汽吉林汽車	자동차	판매저조로 중국에서 사업철수
2010년 6월	미요시유지	南僑化學工業股份 그룹	식용유지	경영방침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분매각

출처: 「中国リスク」, 『週刊ダイヤモンド』, 2010년 10월 30일자, 62쪽.

5월 중국 국영기업 2개사와 합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역시 센카쿠열도 분쟁 와중에서 중국 측의 합당한 해명도 없이 합작이 무산된 사례 등이 자주 거론된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2003년 일본생명보험(日本生命保險)이 중국 상하이광전집단(上海廣電集團)과 절반씩 출자하여 설립한 광전일생인수보험(廣電日生人壽保險)이 해산한 경우도 중국 비즈니스 리스크를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사례이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점도 일본기업이 인식하는 리스크라 할 수 있다. 일본기업에 국한되지 않지만, 중국정부가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업종은 희토류 탐사·채굴업, 서적·신문과 같은 출판·인쇄업, 영화나 TV 프로그램 제작 등이고, 자동차, 철도 차량 및 주요 부품, 민간 비행기 설계·제조·개보수, 학원·사립학교, 의료기관, 보험회사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의 출자비율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기업에 대한 출자제한은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둘러싸고 중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분쟁의 소지가 많아, 일본기업 입장에서는 대중(對中) 비즈니스 상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자 중국 진출을 꺼리게 하는 최대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중국 비즈니스 리스크는 정치체제와 관련된 것이다. 2010년 8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중국 장쑤성(江蘇省)과 저장성을 중심으

로 실시된 일시적 전력공급 제한은 대표적 사례이다. 당시 중국 중앙정부는 제11차 5개년 계획(2006년~2010년)을 통해 표명한, 이 기간 동안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을 2005년 대비 20% 줄인다는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각 지방정부에 ‘통지문’을 발송하였는데, 장쑤성과 저장성은 일방적으로 ‘개9정5’(開9停5: 9일간 조업 후 5일간 정전)라는 전력공급 제한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전력공급 제한조치는 공산당 ‘일당독재’라는 중국 고유의 정치체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일본 측의 인식이다.⁷⁾

4. 일중 간 외교분쟁과 경제협력: 두 가지 사례 연구

가. 일본의 대중 ODA 공여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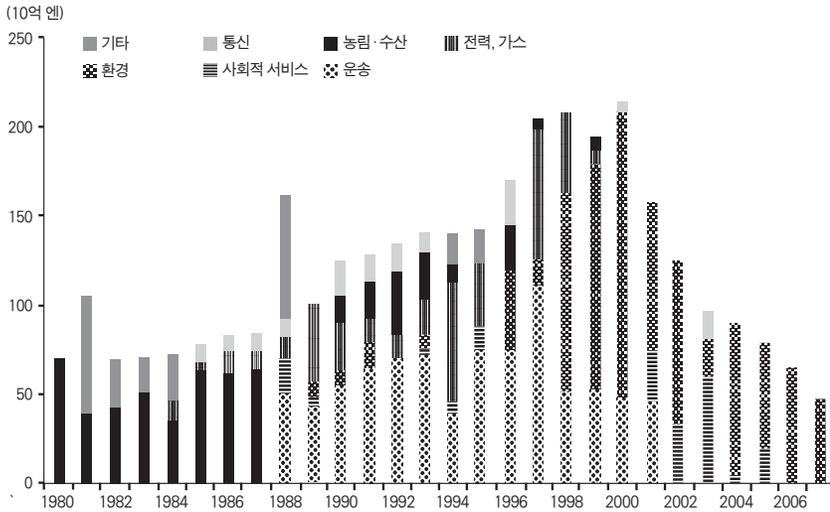
1978년 당시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일본 총리는 중국에 대한 ODA 공여 의사를 밝혔다. 일본정부는 1980년 4월 대중 유상원조 공여를 승인한 이래, 2007년 말까지 유상원조(円借款) 3조 3,000억 엔, 무상원조 1,500억 엔, 기술원조 1,600억 엔을 공여하였다. 일본이 중국에 대해 ODA를 공여한 이유는 동아시아 지역 안정과 번영이 자국의 이해관계에도 깊은 관련을 갖고 있고, 특히 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국사회의 안정과 대외개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였다.

일본의 대중 ODA 공여는 대중관계에서 미국이나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ODA라는 경제협력 수단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일본은 ODA를 통해 중국과의 경제의존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었고, 1989년 천안문사태와 1995년 중국의 핵실험사태 등 탈냉전 시기에 보여 주었던 ODA를 경제제재의 한 방편으로 구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⁸⁾

7) 『週刊ダイヤモンド』, 2010년 10월 30일자, 64쪽 참조.

8) 그러나 마스다 마사유키는 일본정부의 대중 ODA를 경제제재 수단이라기보다는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의 한 수단으로 평가한다. Masayuki Masuda, "Japan's Changing ODA Policy Towards China", *China Perspectives*, no. 47, May-June 2003. pp. 40-49 참조.

〈그림 6〉 일본의 대중 유상원조의 내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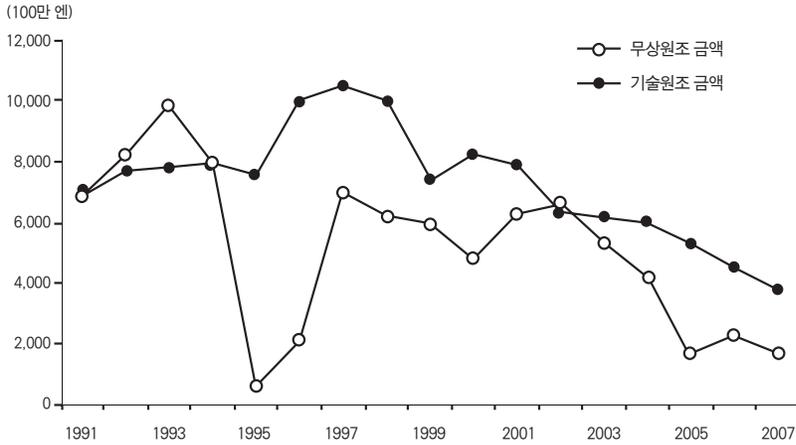


출처: 일본외무성, 정부개발원조 웹사이트[http://www.mofa.go.jp/mofaj/gaiko/oda/region/e_asia/china/index.html, 접속일: 2011. 11. 19]

일본의 대중 유상원조는 중국의 '5개년 발전계획'에 대응하는 형태로 5~6년을 하나의 기간으로 설정한 다음, 그 기간 중의 지원금액과 안건을 사전에 결정하는 '라운드'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제1라운드(1979~1983)에는 중국 내륙부의 석탄을 연해지역으로 수송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데 필수적인 철도나 항만과 같은 운송부문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제2라운드(1984~1989)는 여전히 운송부문의 비중이 높으나, 전력·가스와 통신부문에 대한 유상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생활 수준의 향상도 필요했던 것이다. 제3라운드(1990~1995)에는 운송부문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전력·가스와 통신부문에 이어, 화학비료공장의 건설이나 관개 사업과 같은 농림수산 부문이 새로운 원조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이어 제4라운드(1996~2000)는 환경부문에 대한 원조비중이 운송부문을 추월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중국의 대기오염과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문제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일본정부가 대중 ODA에 대한 내부비판을 수용하여 지원방식을 '단년도방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유상원조 금액 역시 크게 축소하

〈그림 7〉 일본의 대중(對中) 무상원조 및 기술원조 추이



출처: 일본외무성, 정부개발원조 웹사이트[http://www.mofa.go.jp/mofaj/gaiko/oda/region/e_asia/china/index.html, 접속일 : 2011. 11. 19]

였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외무장관의 중단 시사(2000년 5월), 자민당의 대중경제원조 및 협력 가이드라인 발표(2000년 12월), 외무성의 대중경제협력 재검토 방안 발표(2001년 10월), 내각의 신ODA대강 채택(2003년 8월)을 거쳐, 결국 외무성의 유상원조 공여 중단 결정(2005년 3월)으로 일본의 대중 ODA 중 유상원조는 2007년 12월의 교환문서 서명을 끝으로 신규 안건이 중단된 것이다.

2001년 10월 일본정부가 대중 ODA 공여 원칙을 전면 수정하고 나선 데는 그간 일본의 재정악화나 경기침체와 같은 요인도 무시할 수 없지만, 중국의 경제·군사 대국화에 대한 일본 여론의 악화가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일본 자민당 외교조사회는 이미 1997년 5월에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경제규모가 일본을 능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다음, 대중 ODA 공여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1999년 5월 중국 해군함 Haibing-723의 일본 해역 항해나 중국의 국방예산 대폭 증강은 대중 ODA 공여 중단에 대한 국내 여론에 힘을 보태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⁹⁾

2001년 무렵부터 일본 내에서 대두되었던 ‘중국위협론’도 일본정부의 대중 ODA 공여 중단 같은 경제협력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위협론은 중국의 경제·군사 대국화가 패권주의로 경도될 경우, 제3국 또는 세계

전체에 중대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는 일종의 위기의식이다. 경제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중국위협론에 실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별도로 하더라도, 일본 내에서 중국의 경제대국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언론은 물론이고 학계에까지 확산되었다는 점은 일본의 대중 경제협력에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ODA 중 무상원조나 기술원조는 유상원조와 달리 2008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나, 지원금 규모는 2000년 이후의 축소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전문가의 중국 파견이나 중국 연수생의 수건과 같은 무상원조·기술원조 활동은 예전처럼 유지하고 있으나, 지원금의 규모는 절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¹⁰⁾

나. 동중국해를 둘러싼 일중 간 외교분쟁

동중국해를 둘러싼 일중 간 분쟁은 중국의 ‘평화적 발전’이라는 외교노선에 대한 양국 간 의견 차에서 비롯되고 있다. 중국은 19세기부터 제국주의 열강의 압력으로 반식민지 경험을 한 이상, 침략적 영토확장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인접 국가들과는 영토나 해양권의 분쟁을 피하고 공동개발에 나서는 등 평화적 안정유지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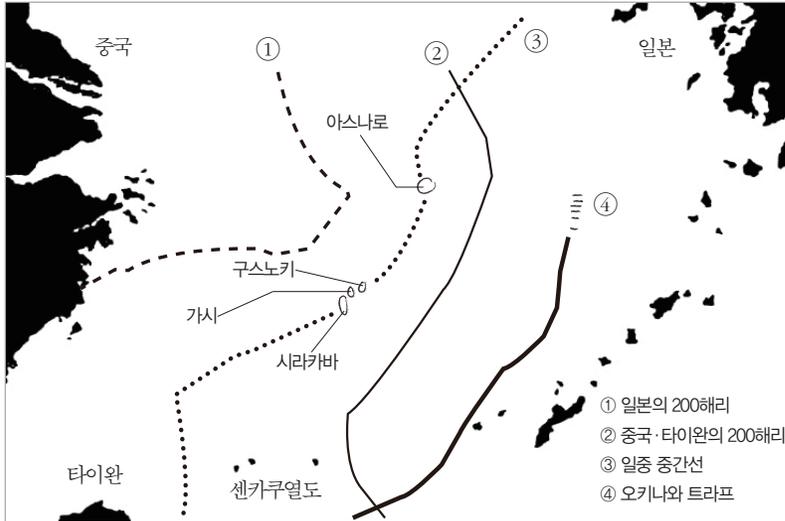
그러나 일중 영토분쟁의 근본적 이유는 중국이 사수하겠다고 표방하는 ‘핵심적 이익’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에 있다. 일본 측 판단으로는 중국의 ‘핵심적 이익’ 범위가 국가 주권과 안전, 국가통일, 정치제도 등을 뛰어넘어 영토보전으로까지 확대된 나머지, 당초 타이완문제에 국한되었던 인접국가와의 분쟁이 티벳은 물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인근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¹¹⁾ 이하에서는 일중관계에 국한하여 ‘현재진행형’인 동중국해 자원개발 문제와 센카쿠열도 분쟁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9) Michael J. Green, "Japan-China Relations", *Japan's Reluctant Realism*, New York : Palgrave, 2002, p. 99.

10) 일본의 대중 ODA 공여 중단과 중국의 ODA 졸업 이후, 일중 간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게이오대학 고쿠분(国分良成) 교수는 중국이 거역의 외환보유국으로서 일본의 높은 기술력에 대해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対中ODAは成功, 21世紀は対日投資』, 『国際開発ジャーナル』, 2009, 12~13쪽 참조.

11) 『週刊東洋経済』, 2011년 10월 22일자.

〈그림 8〉 동중국해 가스전 주변 약도



출처: 国立国会図書館, 「東シナ海における日中境界画定問題」, 『Issue Brief』 no. 547, 2006. 6, 2쪽.

주: 동중국해에서 가스전이 확인된 주요지역은 아스나로(涇榦, 중국명:龍井), 구스노키(楠, 중국명:斷橋), 가시(檉, 중국명:天外天), 시라카바(白樺, 중국명:春曉) 등임.

1) 동중국해 자원개발 문제

동중국해는 일중 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주장하는 분쟁해역이다. 1968년 UN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는 동중국해역 일대에 대한 해양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규모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일본과 중국 당국은 동중국해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동중국해에서 석유·가스전이 확인되었거나 일중 양국간 분쟁 대상이 되고 있는 섬은, 〈그림 8〉에 표시되어 있는 아스나로(涇榦, 중국명:龍井), 구스노키(楠, 중국명:斷橋), 가시(檉, 중국명:天外天), 시라카바(白樺, 중국명:春曉) 4개이다.¹²⁾

동중국해에서의 일중 간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양국의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해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UN해양법과 국제판례 등을 근거로 양국의 영해기선 간 거리를 감안하여 쌍방 거리가 400해

12) 본문에서의 지명표기는 편의상 일본 측이 사용하는 지명을 따르기로 한다.

리 미만인 해역에서는 중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자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트라프¹³⁾까지 연결되어 있는 동중국해의 특성을 감안해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중국해 지역에서 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된 시점은 2003년 8월 중국이 시라카바 가스전 개발에 착수하고 나서부터이다. 이에 일본정부는, 시라카바는 일중 양국이 주장하는 200해리의 중간선, 즉 '일중중간선'에서 서쪽으로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지만, 지하광맥이 '일중중간선'의 동쪽으로까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정부는 2005년 4월, 노르웨이로부터 3차원탐사선을 동원하여 '일중중간선' 동쪽 해역에 대한 자체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라카바 석유·가스전과 구스노키 가스전이 '일중중간선' 동쪽으로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다.¹⁴⁾

한편, 중국은 2005년 9월 가시 가스전에서 채굴을 개시하였고, 시라카바 석유·가스전에서도 해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된 저장성, 닝보시(寧波市)의 천연가스처리시설이 시범운전을 시작하였다.¹⁵⁾ 일본의 일간지들은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동중국해 석유·가스전 부근에서의 군함 운항이나, 동중국해 '일중중간선' 동쪽에서의 조사활동과 같은 중국 측의 동태를 수시로 보도하였다.

결국 일본과 중국 양국 정부는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2004년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년 1, 2회씩 총 10회가 넘는 '동중국해에 관한 일중협의'라는 국장급 회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마지막 회의였던 2008년 6월에는 중국 측이 시라카바 가스전 개발에 일본의 참여를 용인하고, 아스나로 남쪽 '일중중간선'을 걸친 해역에서도 가스전을 양국이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9년 들어 중국정부가 가시 가스전에 대한 단독 개발에 들어갔다

13) 오키나와 트라프(沖縄トラフ, Okinawa Trough)란 동중국해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해역을 말하는데, 본문 <그림 8>에서 알 수 있듯이, 오키나와 서쪽에 위치한다. 약 1,000km의 길이와 약 100km의 폭에 달하는 해구로서 가장 깊은 곳은 약 2,200m이다.

14) 經濟産業省, 『エネルギー-白書 2005年版』, 8쪽 참조.

15) 『毎日新聞』, 2006년 3월 3일자.

는 보도¹⁶⁾가 흘러나왔고, 3월부터 5월까지도 중국 해군의 동중국해에서의 무력 시위, 중국 해양조사선의 조사활동 등과 같은 갈등 요소가 재연되었다. 2010년 들어서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중시한 민주당 정권의 노력도 있었지만¹⁷⁾, 2011년 9월 25일 센카쿠열도¹⁸⁾ 중의 하나인 구바지마로부터 동북쪽으로 121km 떨어진 지점에서 중국 조사선이 확인되는 등¹⁹⁾ 아직 동중국해를 둘러싼 양국 분쟁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기업들이 동중국해 지역의 자원개발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1990년대 들어서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에너지 부족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중국정부의 동중국해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은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 연해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도 에너지 부족 문제로 동중국해 자원개발에 대해서는 중국정부와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다.

그 결과, 1998년 4월 중국정부가 '일중중간선'의 서쪽 약 70km 지점에 위치한 평후(平湖) 가스전에 대한 채굴시설을 완성하고 조업을 시작하였을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은 일본수출입은행(현재는 국제협력은행 JBIC)을 통해 1억 2,0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였다.²⁰⁾ 중국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일중 경제협력 형태로 해결하고자 한 선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03년 8월 중국의 시라카바 가스전 개발 착수 이후부터는 사태가 급변하였다. 현재까지 동일본(東日本)기업의 석유와 천연가스 시출 신청 건수만 하더라도 5만 건을 넘지만, 그간 일본정부가 중국을 배려한다는 관점에서 시굴권 부여에 소극적이었고, 유일하게 2005년 7월 일본정

16) 『産経新聞』, 2009년 1월 4일자.

17) 2010년 5월, 당시 하토야마(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시라카바 가스전 공동개발에서 출자비율의 50% 이상을 중국 측에 양보하는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産経新聞』, 2010년 5월 13일자).

18) 센카쿠열도는 본문 <그림 8>에서 알 수 있듯이, 동중국해에 점재한 섬(무인도)과 암초들을 말한다. 주요 섬은 우오쓰리지마(魚釣島), 구바지마(久場島), 다이쇼지마(大正島), 기타코지마(北小島), 미나미코지마(南小島) 5개이고, 암초는 3개이다. 일본에서는 센카쿠제도(尖閣諸島), 중국에서는 다퇴다오(钓鱼島), 타이완에서는 다퇴다오리리에위(钓鱼台列嶼)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어 센카쿠열도라 칭한다.

19) 『朝日新聞』, 2011년 9월 26일자.

20) 阿南友亮, 『海洋をめぐる日中關係』, 『拂路に立つ日中關係』, 京都: 晃洋書房, 2007, 207쪽 참조.

부가 제국석유(帝國石油株式会社)²¹⁾에 부여한 시굴권 3건마저도 양국 간 분쟁 지속으로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이다. 물론 2004년 9월 시라카바 가스전 개발에 참여한 Royal Dutch Shell과 Unocal사가 중국과의 탐광개발 프로젝트에서 철수한 것을 계기로 시라카바 가스전의 채산성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었지만, 동중국해를 둘러싼 양국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중 경제협력 역시 새로운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2) 센카쿠열도 분쟁과 양국 간 경제마찰

일중 간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분쟁은 앞에서 살펴본 동중국해에서의 자원개발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독립된 사안처럼 다루어지기도 한다. 일본은 1895년 메이징청 부가 탐사를 거친 후, 청일전쟁 승리를 계기로 내각령을 통해 센카쿠열도가 자국 영토임을 선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정부는 이미 1534년에 자국 선박들이 센카쿠열도를 발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²²⁾

지난 2010년 9월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발생한 중국어선과 일본 해상방위청 순시선 간 충돌사건은 동중국해를 둘러싼 일중 양국 간 분쟁이 희토류²³⁾를 둘러싼 ‘자원전쟁’으로 비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중국은 센카쿠열도 주변에서의 충돌 사건 직후인 9월 7일부터 10월 초까지 장관급 일중교류 중단, 자국인의 일본 여행 자제 요청, 도요타자동차 임원의 뇌물 공여 혐의 조사 착수 등 대대적인 대일(對日) 공세에 나섰고, 일본정부로부터 중국인 선장 석방(9. 24)이라는 조치도 이끌어냈지만²⁴⁾, 도중에 일본이 중국인 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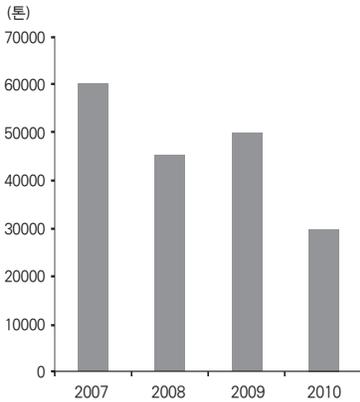
21) 2008년 10월 국제석유개발(國際石油開發)과 함께 국제석유개발데이세키(國際石油開發帝石, INPEX)로 흡수·합병되었다.

22) Michael J. Green, *Japan's Reluctant Realism*, New York: Palgrave, 2002, p. 84 참조.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시대에는 일중우호조약 정신에 입각하여 양국이 센카쿠열도의 해저 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흐름이 주류를 이루었고, 덩샤오핑 당시 중국 공산당 부주석은 1978년 방일시 영토문제는 미래를 위해 보류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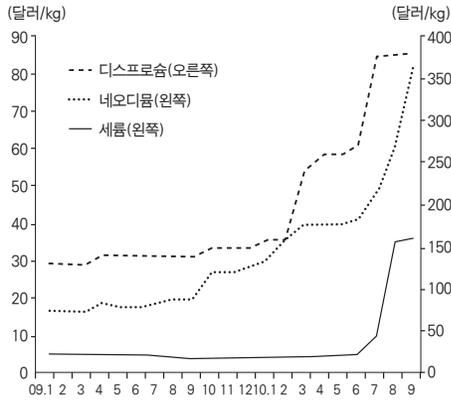
23) 희토류(rare earths)란 총괄하여 하나의 희귀금속(rare metals)으로 간주되나, 원소주기율표 상 57번 란탄 이후의 15개 원소에, 스칸듐과 이트륨을 더한 17개 원소를 일컫는 용어이다.

24) 더 구체적인 사건경위와 의의에 대해서는 김규판, 「일본, 센카쿠 분쟁을 계기로 희토류 확보전략에 고심」, 『지역경제포

〈그림 9〉 중국의 희토류 수출쿼터 추이



〈그림 10〉 일본의 주요 희토류 제품 수입가격 추이



출처: 週刊東洋經濟, 2010년 10월 9일자.

석방을 보류하자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금지하는 통관거부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물론 중국 상무부는 이러한 대일 희토류 ‘금수조치’를 부인하였지만, 일본 정부는 희토류는 물론 다른 제품의 수출규제 여부를 조사하여 금수조치로 판명 되면 WTO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중 양국 간에 희토류를 둘러싼 갈등이 점화된 시점은 중국정부가 희토류의 수출쿼터를 대폭 축소한 2009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의 2010년도 하반기 수출쿼터를 전년 동기보다 70% 줄어든 약 8,000톤으로 정하였고, 이로써 2010년 총수출쿼터는 전년에 비해 약 40%가 줄어든 3만 258톤으로 급감하였다. 중국정부는 희토류의 수출쿼터를 매년 2회에 걸쳐 정하고, 2006년부터는 수출세도 부과하고 있는데 2008년 1월에는 수출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중국의 수출쿼터 축소는 〈그림 9〉와 〈그림 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글로벌 경제의 회복과 하이테크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희토류 수요 증가와 맞물려 일본 국내의 희토류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

희토류 17개 원소 가운데 현재 주로 사용되는 것은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세

커스, 10-39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이면우, 「전후 일중관계의 전개 및 향후양상」, 세종정책연구 2011-21, 세종연구소, 2011 참조.

름, 란탄이다.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은 컴퓨터 HDD나 핸드폰, FA(공장자동화) 기기, 하이테크 가전제품의 영구자석과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자동차의 모터에 들어가는 영구자석에도 사용되고, 세륨은 자동차·빌딩의 유리나 배기가스 촉매, 유리·반도체의 연마제, 조명 형광체, 란탄은 촉매, 광학렌즈, 석유정제, 전자부품에 각각 사용되고 있다.

일본기업들이 IT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의 첨단 소재·부품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거의 석권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일본 입장에서 중국의 대일 희토류 금수 조치는 치명적이다. 2009년 일본의 희토류 소비량은 약 2만 톤으로 세계 전체의 20%, 미국과 유럽의 2배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90%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의 경우, 중국의 연간 희토류 수출량은 5만 톤이었는데, 수출지역은 일본이 5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미국 17%, 프랑스 6% 순이었다. 희토류 중에서도 디스프로슘은 전기자동차 생산·보급에 필수적인데, 중국 이외에는 마땅한 광상(鑛床)이 없다는 데 고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의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 명분은 자원고갈에 대한 우려, 국내 환경 보호, 내수 우선에 있다. 이들 명분 중에서도 광석에서 희토류를 채취하고 남는 잔토에는 유해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무분별한 희토류 채취는 환경오염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수출규제는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중국정부가 일본기업에게 첨단기술이나 생산거점 이전 압력을 가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 및 대일금수 '카드'를 꺼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중국기업으로서는 하이브리드카나 IT가전제품 등의 분야에서 일본의 첨단 기술이 절실하나, 일본기업들은 기술유출 문제로 중국으로의 생산이전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온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현재 가장 큰 각광을 받고 있는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경우, 일부 중국기업들도 일본 히타치금속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제공받아 생산하고 있으나 용도가 전동자전거나 장난감, 스피커 등에 머물고 있어, 일본기업의 중국 진출을 통한 기술이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희토류를 둘러싼 일중 간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소지가 크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례는 도요타자동차이다. 도요타자동차는 중국의 희토류 대일 금

수조치 이전인 2010년 2월 중국 지린성 창춘 당국에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의 생산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허가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 내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가 도요타자동차의 영구자석 기술이전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도²⁵⁾ 되기도 하였다. 도요타자동차가 희토류를 사용하는 영구자석을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대일 희토류 금수조치를 압력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요타자동차는 2011년 9월, 2013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모터 등 첨단부품을 중국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²⁶⁾ 그간 기술유출을 꺼려 온 도요타자동차가 중국정부의 희토류 금수조치에 ‘굴복’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일중 양국 간 분쟁이 기업활동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례로 봐야 함은 분명한 것 같다.

5. 일본의 대중 무역 및 직접투자: 중국위협론의 검증

‘중국위협론’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중국 경계심리는 멀리 19세기 메이지시대로까지 소급되는데,²⁷⁾ 전후에는 소련 붕괴로 상징되는 1990년대의 냉전해체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등장하였다. 앞 절에서 살펴본 두 가지 사례분석은 중국위협론이 외교·안보 영역에서 실체를 획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경제 관점에서 중국위협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계심리로 요약할 수 있다.²⁸⁾ 첫째, 중국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중국기업의 국제경쟁력도 크게 신장하여

25) 『日本經濟新聞』, 2010년 9월 26일자.

26) 『日本經濟新聞』, 2010년 9월 18일자.

27) 19세기 당시 일본에서의 중국위협론에 관한 논의는 村井友秀, 「明治前期日本における中国脅威論」, 『防衛大学校紀要』, 社会科学分冊(50), 1985 참조.

28) 경제 관점에서 중국위협론을 정면에서 다루고 있는 일본 내 대표 연구로는 伊藤元重, 『日中關係の經濟分析—空洞化論·中国脅威論の誤解』,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2003; 鬼塚義弘, 「中国脅威論に関する一考察」, 『國際貿易と投資』 no. 51, 國際貿易投資研究所, Spring 2003; 江川治男, 「經濟的中国脅威論に関する一考察」, 『現代中国事情』 no. 10, 2006을 들 수 있다.

〈표 2〉 한국과 일본의 대중 수입 추이

년도	한국			일본		
	전체수입액 (100만 달러)	대중수입액 (100만 달러)	비중(%)	전체수입액 (10억 엔)	대중수입액 (10억 엔)	비중(%)
1990	69,844	2,268	3.2	33,855	1,730	5.1
1995	135,119	7,401	5.5	31,549	3,381	10.7
2000	160,481	12,799	8.0	40,938	5,941	14.5
2005	261,238	38,648	14.8	56,949	11,975	21.0
2008	435,275	76,930	17.7	78,955	14,830	18.8
2009	323,085	54,246	16.8	51,499	11,436	22.2
2010	425,212	71,574	16.8	60,765	13,413	22.1

출처: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세계시장은 물론 일본시장에서도 일본기업을 위협할 것이라는 논리다. 둘째, 중국경제가 부상함에 따라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중국으로 집중되고, 결국은 일본 국내에 ‘산업공동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논리다. 일본 국내 고용 관점에서 중국경제의 부상은 결코 달가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 제품이 일본시장을 석권할 것이라는 첫번째 위협론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일본의 무역통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전체 수입액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0년에는 5.1%에 불과하였지만 1995년에는 10.7%, 2000년에는 14.5%, 그리고 2005년에는 21.0%로 5년마다 5% 포인트씩 증가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20%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전체 수입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하면, 일본 쪽이 훨씬 많이 중국 제품을 수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일본기업들 가운데 중국 제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다. 이러한 상황들이 일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국위협론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표 3〉, 즉 일본의 대중 무역수지에 관한 데이터를 보면 상황은 좀 달라진다. 앞의 중국위협론이 일본의 대중 무역관계에서 ‘실체’를 갖고 있다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본시장에 중국 제품이 유입됨에 따라, 일본의 대중 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본시장에 중국 제품이 유입

〈표 3〉 일본의 대중 무역수지 현황

년도	전체수출액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무역적자 비율* (%)
1990	41,457	884	1,730	-846	2.0
1995	41,531	2,062	3,381	-1,319	3.2
2000	51,654	3,274	5,941	-2,667	5.2
2001	48,979	3,764	7,027	-3,263	6.7
2005	65,657	8,837	11,975	-3,139	4.8
2009	54,171	10,236	11,436	-1,200	2.2
2010	67,400	13,086	13,413	-327	0.5

단위: 10억 엔

주*: 일본의 대중 무역적자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출처: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되는 만큼 중국시장에도 일본 제품이 수출을 통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본의 대중 무역수지가 꾸준히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일본의 대중 무역관계에서 중국위협론은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 2〉에서 나타나는 일본의 대중 무역수지 상황은 중국위협론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일본에서 중국위협론이 맹위를 떨치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일본의 대중 무역수지는 2000년 2조 6,670억 엔, 일본의 전체 수출액 대비 대중 무역적자 비율은 5.2%에 달하였고, 2001년에는 3조 2,630억 엔의 사상 최대의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물론 일본은 중국에 대해 지금까지 줄곧 무역적자를 시현하고 있으나, 2001년을 정점으로 그 규모는 감소추세에 있다. 2009년에는 일본의 전체 수출액 대비 대중 무역적자 비율이 2.2%로까지 떨어졌고, 2010년에는 다시 사상최저 수준인 0.5%를 기록하였다.

일본의 대중 무역현황을 볼 때,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수출도 증가하여 양국 간 경제관계가 상호 보완을 이루어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결국은 일본의 산업공동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두번째 중국위협론에 대해 살펴보자. 중국 덩샤오핑(鄧小平) 국가주석의 1992년 '남순강화'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 혹은 '세계의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방대한 중국시장을 겨냥하여 수요시장에 근접한 중국 국내로 진출하는

〈표 4〉 세계 주요국·지역의 대내직접투자 현황

	세계전체	중국		미국		EU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95~2004*	873.7	59.5	6.8	163.7	18.7	323.8	37.1
2005~2007*	1471.8	76.2	5.2	185.9	12.6	642.8	43.7
2008	1744.1	108.3	6.2	306.3	17.6	487.9	28.0
2009	1185	95	8.0	152.9	12.9	346.5	29.2
2010	1243.7	105.7	8.5	228.2	18.3	304.7	24.5

단위: 10억 달러

주*: 1995년~2007년까지의 통계는 연평균 수치임.

출처: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표 5〉 일본의 주요국·지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년도	전체	중국		ASEAN5		미국		EU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05	50,459	7,262	14.4	5,390	10.7	13,599	27.0	8,633	17.1
2006	58,459	7,172	12.3	7,497	12.8	10,834	18.5	20,875	35.7
2007	86,607	7,305	8.4	8,519	9.8	18,524	21.4	23,636	27.3
2008	132,320	6,700	5.1	5,309	4.0	44,617	33.7	23,431	17.7
2009	69,896	6,492	9.3	6,039	8.6	9,989	14.3	15,942	22.8
2010	49,388	6,284	12.7	7,050	14.3	7,968	16.1	7,146	14.5

단위: 억 엔

출처: 일본 재무성

것은 당연한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표 4〉를 보면,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 전체의 대내직접투자(FDI Inflows) 중 중국의 비중이 5~6%대에서 8%대로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해외기업들을 가장 많이 유치하고 있는 지역 혹은 국가는 EU와 미국이다. EU의 경우 중국과 반대방향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직접투자 비중이 30~40%대에서 20%대로 급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최대의 대내직접투자 유치지역이다. 미국 역시 중국보다 10% 포인트 정도 높은 직접투자 유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기업의 경우도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와 같은 세계 흐름에서

예외적이지 않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FDI Outflows) 통계를 보면, 최대의 해외 투자처는 중국이 아닌 미국과 EU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미국과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에 따라 다소 변동 폭이 크지만, 중국보다 적게는 4~5% 포인트, 많게는 10% 포인트 이상 높다. 나아가, 중국이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ASEAN 5개국(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과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기업들이 중국으로 대거 이전하여 산업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중국 위협론의 두번째 논리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중국이 G-2로 부상하는 과정을 GDP, 교역규모, 외환보유고와 같은 경제지표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그럼에도 중국이 장기적으로도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기업의 기술수준이나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농촌인구의 도시유입 한계에 따른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면, 중국이 '중진국의 덩'에 빠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다는 데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중국정부가 외국자본을 대량 유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합작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리스크'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중국리스크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중국이 선진경제권으로 편입하기에는 '중국리스크'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경제의 부상은 일본에게 위협적이라 할 수 있는가? 일본 자민당이 1997년 5월, 중국의 경제규모가 2010년을 기점으로 일본을 능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다음, 대중 ODA 공여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면서 촉발된 중국 위협론은 그 이후의 ODA 공여중단, 그리고 동중국해를 둘러싼 일중 간 자원개발 분쟁과 희토류를 둘러싼 자원분쟁으로 비화된 센카쿠열도 분쟁으로 이어짐으로

써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외교 측면에서는 중국위협론이 현실화됨으로써 일중 양국 간 분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위협론이 경제 ‘영역’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밖에 없다. 만일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일본이 국내시장을 중국에 내주고 있다든지, 일본기업의 대중 직접투자 급증으로 일본 국내에 산업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면, 이는 분명 경제 영역에서 대중위협론이 실체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일본의 대중 무역통계와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보는 한, 이와 같은 ‘가설’은 수용하기 힘들 것 같다. 즉, 중국경제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중 무역적자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5~6%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2% 이하로까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일본의 최대 해외직접투자국은 중국이 아닌 미국과 EU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춰 볼 때, 외교 측면과는 달리 일중 경제관계는 상호보완관계로 인식하는 편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중국경제의 부상과 일중 경제관계 | 김규판

투고일자: 2011년 12월 10일 | 심사완료일자: 2011년 12월 20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1월 26일

본고는 2000년대 이후 중국경제의 위상이 G-2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고,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리스크와 중국위협론을 주로 경제 측면에서 검증하고 있다. 중국리스크란 중국이 지금과 같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인데, 본고는 현재 중국기업의 기술수준이나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농촌인구의 도시유입 한계에 따른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면, 중국이 '중진국의 덩'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한다. 그런데 중국의 부상은 일본에게 군사적 측면은 물론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불안요소라는 중국위협론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즉, 2000년대 들어 발생한 ODA 공여중단이나 동중국해를 둘러싼 일중 간 자원개발 분쟁, 그리고 희토류를 둘러싼 자원분쟁을 보면, 중국위협론은 분명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국내시장을 중국에 내주고 있다든지 일본기업의 대중 직접투자 급증으로 일본 국내에 산업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든지 등의 근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춰 볼 때, 일중 경제관계는 상호보완관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게 본고의 주장이다.

주제어: 중국리스크, 중국위협론, 일중경제관계, 동중국해에서의 일중자원분쟁

전후일본의 보수주의와 『고코로』 | 장인성

투고일자: 2011년 12월 6일 | 심사완료일자: 2011년 12월 23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1월 26일

탈냉전과 지구화 맥락의 현대일본에서 국가의식과 애국심을 고양시키려는 보수의 정치화가 현저해지고 있다. 개인의 삶과 자유를 중시하는 일상적 보수는 퇴조한 듯 보인다. 하지만 전후일본의 보수주의는 일본인들의 일상적 보수를 알아야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월간문예지 『고코로』(1948~1981)에 참여한 보수지식인들의 활동과 사상에서 전후일본에서 영위된 일상적 보수의 모습을 읽어 낼 수 있다.

아베 요시시게, 무사노코지 사네아쓰, 시가 나오야 등 다이쇼 교양주의와 자유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삼았던 '올드 리버럴리스트'들은 전후에 『고코로』를 매개로 유연한 지식인 클러스터를 이루면서 언설 활동을 주도했다. 고코로 보수주의자들은 패전 직후와 냉전 초기에 전후일본의 지식사회를 주도한 『세계』 지식인들의 진보주의와도 거리를 두었고, 『사상의 과학』 지식인들의 과학주의에도 대항하면서, 자유주의와 교양주의에 기초한 문화적 보수주의를 표방했다.

고코로 보수주의자들은 투쟁과 정치와 이론보다는 교양과 문화와 체험을 중시했다. 진보지식인들의 정치적 민주국가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교양과 문화를 중시하는 문화

Keywords : Overseas Chinese, International Chinese students, Immigration Bureau of Japan, Tokyo Ikebukuro, foreign community in Japan

Japan's Quest for East Asian Community and China: Idea and Reality

_ LEE Cheol Ho

Japan's quest for East Asian Community represents a metamorphosis of Japanese diplomacy in 21st century. This paper reviews political contents of Japanese regional community idea in the context of 'the return of East Asia' and 'the rise of China', and seeks to find its implications for the evolution of East Asia and the transformation of regional order.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post-international political features of the East Asian regionalism are deeply rooted in the traditional regional order, this article sends Japan's regional community policy back to the structure and longlasting patterns of East Asian time-space. In doing so, it reflects the particularity of East Asian regionalism and investigates the double face of Japanese regional policy.

Keywords : Japan, East Asia, regionalism, China, community, ASEAN

The Rise of the Chinese Economy and Sino-Japanese Economic Relations

_ KIM Kyu Pan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rise of the Chinese economy as one of the G-2 members in the 21st century, and further inspects the so called 'China Risk' and 'Chinese Threat to Japan' arguments in terms of economic perspective. First of all, it is confirmed that the Chinese economy may fall into the middle-income trap mainly due to their firms' low-level technology, low fertility rates, population aging, and wage push. However, it is shown that 'Chinese threat to Japan' in terms of economic perspective may not be as serious as it is expected. Recently, 'Chinese Threat to Japan' has been realized in a series of diplomatic episodes such as Japanese government's suspension of ODA commitments to China, and Japan-China conflicts over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in East China Sea. Notwithstanding these diplomatic conflicts between Japan and China, there is no evidence that Chinese firms dominate Japanese domestic markets or the growing increase of Japanese firms' FDI into China cause deindustrialization of Japan.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Japan-China economic relationship should be considered as mutually complementary, rather than incompatible.

Keywords : China Risk, Chinese Threat to Japan, Japan-China economic relationship, Japan-China conflicts over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in East China Sea

***Gokoro* Intellectuals' Conservatism in Postwar Japan** _ JANG In Sung

In the context of the post-Cold War and globalization Japanese conservatives' activities to promote national identity and patriotism have become prominent. Accordingly it seems daily life conservatism respecting the life and freedom of the individual is decreasing. Japanese conservatism, however, cannot be properly explained without investigating into the Japanese way of acting and thinking in their life. Daily life conservatism in postwar Japan can be grasped by probing into conservative intellectuals' activities and writings in the monthly literature magazine *Gokoro* (1948~1981).

“Old liberalists” including Yoshishige Abe, Saneatsu Mushanokoji and Naoya Shiga, who had conveyed cultural liberalism in Daisho period, reappeared as liberal conservatives, forming a flexible cluster of conservative intellectuals to cope with the post-war intellectual change. *Gokoro* intellectuals expressed their conservatism based on cultural liberalism while keeping a considerable distance from Sekai intellectuals' progressivism and being antagonistic to Shisono Kagaku intellectuals' scientism.

Gokoro conservatives respected liberal culture and experience rather than politics and theory. They believed Japan must make a cultural liberal state, not a political democratic state Japanese progressivists tried to realize. They favored Japan's change inducing by people's concrete experience where the will to life worked, not its radical innovation deducing from theorists' abstract ideas. While respecting individuals' freedom they thought it must not harm the order of the community. They assumed the real peace can be constructed with the will to life and struggle, criticizing the progressivists' abstract ideas of absolute peace. *Gokoro* conservatism had to see the rise of militant conservatism when cultural liberalism had faced the competitive context of economic growth and globalization.

Keywords : *Gokoro*, *Sekai*, *Shisono Kagaku*, postwar Japan, *Gokoro* group, old liberalists, conservatism, liberalism, Culturalism, progressivism, scientism, individual, freedom, experience